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29
2015. 6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5.5.1~5.31)

건축문화 부문

- 서울시, 동주민센터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건축가 80명 참여
- 서울시, 한양도성 전체지역 관리원칙·방향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 대구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최
- 국토부,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대전시,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건축기반 도시재생 전략'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인천시, '공공디자인 한마당' 개최
- 경기도, 제7차 도시재생포럼 개최
- 대구시, '제 20회 아시아 건축ICT 국제학술대회' 개최
- 세종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부산시, 2015년 제3차 도시건축시민투어 실시
- 대구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개최
- 서울시, '2015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개최
- 울산시,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녹색 건축·도시 부문

-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시행
-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통폐합안 행정예고
- 대구시, 2015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 농촌진흥청, 15일 농촌의 맛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 방안 심포지엄 개최
- 산림청,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개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울산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 경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 마련
-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도입, 9대 운영 개선책 마련·시행
- 국토부, 대구·대전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LH공사가 선도사업 진행
-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
- 인천시, 내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8개 신청
- 서울시, 교육청 협업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5곳으로 확대
- 경남도, 김해·하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 부산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 울산시, 도시경관 시범사업 착수
- 충북도, 도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 경북도, 국토부 공모사업 7개 선정
- 대전시, 원도심 재생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거리 조성 추진
- 인천시, 전국 최초 재개발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 지역활성화 위해 올해 18개소 보행환경 개선
- 국토부, 공공주택 중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경북도, '토탈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 울산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 토론 실시
- 대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6월호 (통권 29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5. 6. 29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건축문화 부문

- 8 서울시, 동주민센터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건축가 80명 참여
- 8 서울시, 한양도성 전체지역 관리원칙 · 방향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 9 대구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최
- 9 국토부,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10 서울시, '2015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개최
- 10 울산시,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 11 대전시,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건축기반 도시재생 전략'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11 인천시, '공공디자인 한마당' 개최
- 11 대구시, '제 20회 아시아 건축ICT 국제학술대회' 개최
- 11 세종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11 부산시, 2015년 제3차 도시건축시민투어 실시
- 11 대구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개최

녹색건축·도시 부문

- 12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 12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3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4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시행
- 15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통폐합안 행정예고
- 15 대구시, 2015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 1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 16 농촌진흥청, 15일 농촌의 멋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 방안 심포지엄 개최
- 17 산림청,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개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18 울산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18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 19 경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 마련
- 20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도입, 9대 운영 개선책 마련·시행
- 20 국토부, 대구·대전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공사가 선도사업 진행
- 21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
- 22 인천시, 내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8개 신청
- 23 서울시, 교육청 협업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5곳으로 확대

- 24 경남도, 김해·하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 24 부산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 24 울산시, 도시경관 시범사업 착수
- 25 충북도, 도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 25 경북도, 국토부 공모사업 7개 선정
- 26 대전시, 원도심 재생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 26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거리 조성 추진
- 27 인천시, 전국 최초 재개발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 28 서울시, 지역활성화 위해 올해 18개소 보행환경 개선
- 29 국토부, 공공주택 중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29 경북도, '토탈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 30 울산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 토론 실시
- 30 대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이달의 건축문화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관련 소식을 비롯한 세미나와 아카데미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두루 발표되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대구시는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및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개최 소식을 알렸고, 경기도는 ‘제7차 도시재생포럼’ 개최를 알리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공디자인’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9번째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소식을 알렸고, 인천시는 ‘공공디자인 한 마당’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3번째 ‘도시건축시민투어’의 시작을 알렸으며, 대구시에서 개최된 ‘제20회 아시아 건축CT 국제학술대회’ 소식 등 다양한 건축문화계 소식들이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와 관련해서는 많은 발표가 있지는 않았으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공원, 녹지, 경관과 관련한 법률 개정 및 비전 전략 수립, 설계공모 등 다양한 범위의 활동들이 이어졌다.

먼저, 국토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시행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법률 개정 소식을 알렸고,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에서는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및 ‘농촌정원 조성방안 심포지엄’ 등의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밖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2030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소식을 알렸으며, 대구시는 ‘2015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세부 사업계획을 알렸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각종 시범사업 공모, 심의기준 마련,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소식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소식들이 두루 발표되었다.

먼저, 국토부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공공주택 중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소식을 알렸으며, 서울시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 도입 및 운영 개선책 마련 및 시행’ 소식을, 인천시는 ‘전국 최초 재개발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소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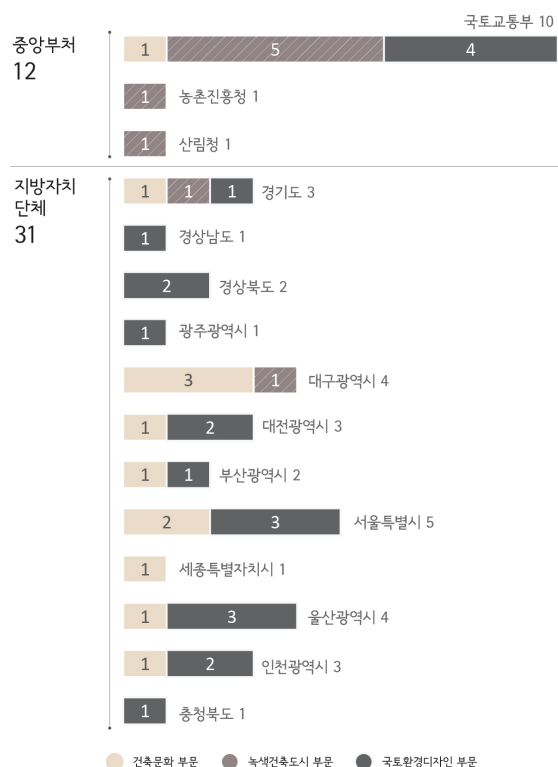
또한, 경기도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해 심의 시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울산시는 ‘도시경관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다양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수집 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는 총 42건이다.

이 중 국토부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에서 12건(28.6%)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고, 국토부에서 10건(23.8%),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 각각 1건(2.4%)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제주, 전북, 전남, 충남을 제외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건(71.4%)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서울시에서 5건(11.9%), 울산과 대구가 각각 4건(11.4%)의 정책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1건(2.4%)~3건(7.1%) 정도의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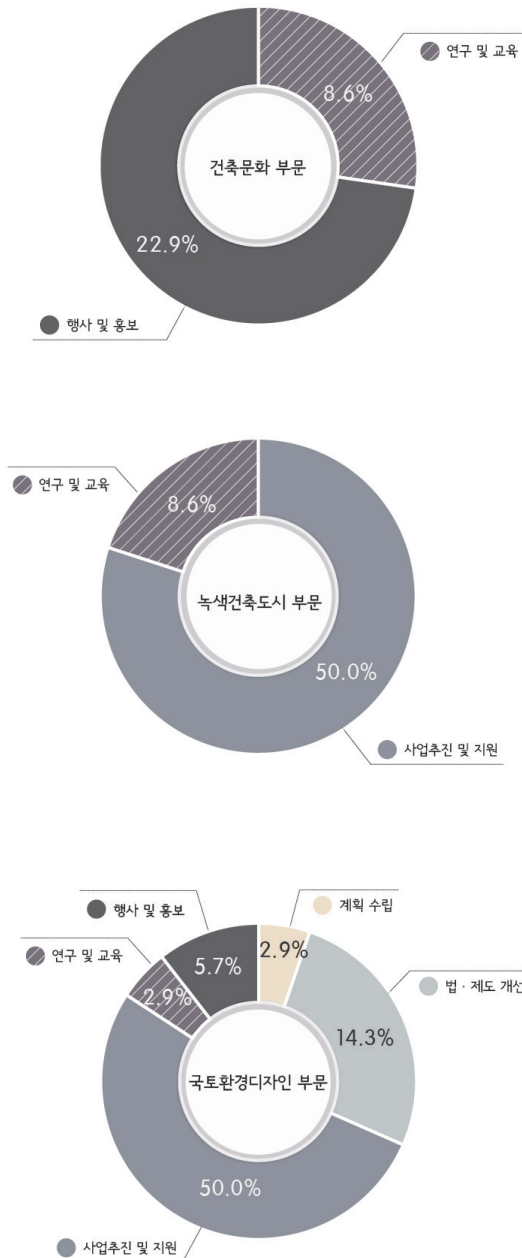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전체 35건 중 17건(40.5%)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로, 국토부의 정책사업 10건(9.5%)이었으며, 나머지는 대구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발표한 정책사업인 것으로 정리된다.

이밖에 ‘건축문화’ 부문의 보도자료는 12건(28.6%)으로 국토부 1건(2.4%), 대구시와 서울시 등 7개 지자체의 정책사업이 11건(26.2%)이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보도자료는 9건(21.4%)으로 국토부 5건(11.9%),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정책사업이 각각 1건(2.4%)으로 중앙부처의 발표가 중점적이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교통부	1(2.4%)	5(11.9%)	4(9.5%)	10(23.8%)
농촌진흥청	—	1(2.4%)	—	1(2.4%)
산림청	—	1(2.4%)	—	1(2.4%)
합계 (중앙부처)	1(2.4%)	7(16.7%)	4(9.5%)	12(28.6%)
경기도	1(2.4%)	1(2.4%)	1(2.4%)	3(7.1%)
경상남도	—	—	1(2.4%)	1(2.4%)
경상북도	—	—	2(4.8%)	2(4.8%)
광주광역시	—	—	1(2.4%)	1(2.4%)
대구광역시	3(7.1%)	1(2.4%)	—	4(9.5%)
대전광역시	1(2.4%)	—	2(4.8%)	3(7.1%)
부산광역시	1(2.4%)	—	1(2.4%)	2(4.8%)
서울특별시	2(4.8%)	—	3(7.1%)	5(11.9%)
세종특별자치시	1(2.4%)	—	—	1(2.4%)
울산광역시	1(2.4%)	—	3(7.1%)	4(9.5%)
인천광역시	1(2.4%)	—	2(4.8%)	3(7.1%)
충청북도	—	—	1(2.4%)	1(2.4%)
합계 (지방자치단체)	11(26.2%)	2(4.8%)	17(40.5%)	30(71.4%)
총 계	12(28.6%)	9(21.4%)	21(50.0%)	42(10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세부 분야별로 봤을 때 보도자료 42건 중 16건(38.1%)은 ‘행사 및 홍보’ 관련 자료이고, 15건(35.7%)이 사업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자료로, 5월에는 건축·도시 관련 행사와 추진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중점적이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밖에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7건(16.7%)의 발표가 있었으며, ‘계획수립’ 분야와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도 각각 2건(4.8%)의 발표가 있었다.

이 중 「건축문화」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는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자료가 10건(23.8%)으로 특히 많았으며,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자료가 13건(31.0%)으로 가장 중점적이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법·제도 개선’ 및 ‘행사 및 홍보’ 관련 보도자료가 4건(9.5%), 3건(7.1%)으로 주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1(2.4%)	1(2.4%)	2(4.8%)
법·제도 개선	—	3(7.1%)	4(9.5%)	7(16.7%)
사업추진 및 지원	1(2.4%)	13(31.0%)	1(2.4%)	15(35.7%)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1(2.4%)	1(2.4%)	—	2(4.8%)
행사 및 홍보	10(23.8%)	3(7.1%)	3(7.1%)	16(38.1%)
총 합계	12(28.6%)	21(50.0%)	9(21.4%)	42(10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서울시, 동주민센터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건축가 80명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015.05.12.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¹와 주민 참여 활성화 거점으로 기능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개선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승효상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서울시 공공건축가 50명과 총괄MP(김인철 아르키움 대표, 김찬중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건축가 30여 명 등 총 80여 명의 건축가가 동시에 참여한다.

건축가 1명이 1개 동주민센터를 전담해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준비부터 설계, 디자인 감리까지 공간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공간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만들어내고 이와 별도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상담장소는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 업무공간은 찾아가는 복지와 원스톱 상담을 위해 센터별로 사회복지직 5~6명, 방문간호사 1~2명이 추가 배치되는 점을 고려해 센터마다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센터마다 공사비 약 5천만 원을 지원, 올해 79개동을 시작으로 '18년 까지 전체 423개동을 개선할 계획이다.

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기존의 민원·행정기능 중심이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 주민참여활성화의 거점으로 개편하여 주민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15년 7월, 79개동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서울시 전체 25개구 423개동에서 시행 예정.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건축가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함께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양도성 전체지역 관리원칙·방향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적용해온 도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관리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그 적용범위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서대문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계획으로, 도심부에 대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2000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년)을 전신으로하며, 3년여에 걸친 전문가와 시민, 지역주민의 논의 끝에 마련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목) 발표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심부에 대한 각종 문화, 교통, 주거, 산업, 환경 관련 사업 및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또 각종 정책 수립 시 도심부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된다.

특히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한양도성 보존과 함께 서울 역사도심을 만들어갈 중요한 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이 간직한 ‘골목길의 아기자기함’,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 ‘다종다양한 도심특화산업지역의 활력’, ‘내사산과 어우러진 경관의 매력’을 살리면서 가꾸고 활용해 그 가치를 높이고, ‘서울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사도심내 역사문화자원 보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5.14.

대구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단

대구시는 2011년 이후 5번째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강의와 함께 법률, 세무, 감정평가 등 실생활에 유용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5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의내용은 대구대학교 전경구 교수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례와 경험,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외의 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도시재생 등이다.

2015.05.06.

국토부,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부는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에 공헌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국무총리상 2점, 장관상 3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5점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오는 7~8월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9월 수상자 발표 및 10월 중 시상식 개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포스터

2015.05.04.

서울시, '2015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개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추진반

서울시는 바람직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15 서울 좋은간판 공모전」을 5월 26일(화)부터 7월 24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간판 디자인 및 시민의 창의적인 간판 디자인을 발굴하여 서울시내 옥외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서울좋은간판 공모전'은 작년 새로이 창작 간판 부문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매년 수상작은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2009년 이후 수상작 160여점 게시)에 게시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좋은 간판 부문 ▲ 창작 간판 부문 ▲ 간판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 3개 부분을 공모한다. 좋은 간판 부문은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디자이너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창작 간판 부문은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간판 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올해에는 시민심사 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후보작들을 구경하고 직접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공간을 꾸밀 계획 중에 있다.

수상자는 좋은 간판 및 창작 간판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14점으로 총 상금은 1,300만원이다.

수상작은 서울시청, 독점 자벌레 전시관, 서울시립도서관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이후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2015 SEOUL GOOD SIGN CONTEST

2015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총상금 1,300만원

2015. 5. 26. ~ 2015. 7. 24.

http://goodsign.seoul.go.kr

공모부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추진반 / 간판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

공모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추진반 / 간판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

창작간판 부문
·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기간: 2015. 5. 26. ~ 2015. 7. 24. (총 59일간)

좋은간판 부문
·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디자이너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기간: 2015. 5. 26. ~ 2015. 7. 24. (총 59일간)

간판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
· 서울시 자치구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공모방법 및 제출할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접수
2015. 5. 26. ~ 2015. 7. 24. (총 59일간)

심사내역
구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창작간판 부문 | 1등, 20만원 | 2등, 10만원 | 3등, 5만원
좋은간판 부문 | 1등, 300만원 | 2등, 150만원 | 3등, 100만원
간판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 | 1등, 300만원 | 2등, 150만원 | 3등, 100만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수상작은 공짜로 제작한 후 부속으로 간판개선 사업과 함께 제출한다. 수상작은 서울시청, 독점 자벌레 전시관, 서울시립도서관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서울시청, 독점 자벌레 전시관, 서울시립도서관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서울시청, 독점 자벌레 전시관, 서울시립도서관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처
(02) 12-2000 서울시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추진반

2015.05.25.

울산시,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품격있고 창조적인 도시디자인' 주제, 11월 16일~17일 접수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품격있고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위해 전국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울산시 가치를 도시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며, 창조적 감성이 머무는 공간 및 대상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는 ‘품격 있고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사업 △태화강 교량 디자인 개선사업 △자유주제(창조적 울산 만들기) 등 3개 분야 중 하나를 자유선택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2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월 17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출품신청서, 작품패널, 작품설명서, CD-R(데이터) 등을 갖추어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작년보다 특선 10명이 추가되어 대상(1명), 금상(2명), 은상(2명), 동상(5명), 특선(10명), 입선(10명) 등 총 30개 작품을 시상하며, 대상 500만 원, 금상 각 300만 원, 은상 각 150만 원, 동상 각 80만 원, 특선 각 2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은 11월 23일 ~ 27일 작품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발표된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12월 중 예정되어 있다.

울산시는 공모전 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2015.05.27.

■ 기타 건축문화 소식

2015.5.7.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건축기반 도시재생 전략’ 전문가 초청세미나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시의회 김동섭 의원실

2015.5.8.

공공디자인 민·관 협약 체결식 및 시민 디자인 한마당 행사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하대학교, 김현선디자인연구소

2015.5.20.~23.

제20회 아시아 건축ICT 국제학술대회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주최/주관)(사)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사)한국현대건축학회

2015.4.9.~4.12.

세종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4층 중연회장
(주최/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5.30.

제3차 부산도시건축시민투어

부산진구 일대 녹지공원
(주관)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15.6.1.

대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
(주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 희망의 문을 열다”
(주최/주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시민의견, 행정, 전문가, 관련사례를 바탕으로 비전수립,
3개 핵심키워드, 9개 세부전략, 15개 전략사업을 도출

경기도 공원녹지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공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은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가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분야의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을 추진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아울러, 9가지의 세부전략을 세우고 15개 전략사업을 도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주요 현안인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31개 시·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며,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원녹지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쓰일 공간정보와 분석결과 데이터를 시군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해결해 나갈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7.5㎡에서 12.5㎡향상, 공원녹지율1.1%에서 2.1% 향상, 공원 조성률 40.7%에서 73.4%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05.08.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5.12.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5.21~6.30, 40일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설치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② 완충녹지 최소폭을 5m로 조정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다.

③ 보훈회관 허용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5.05.21.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

2.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2015.05.28.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통폐합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

2015.05.31.

대구시, 2015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공공·민간부문 20개소 사업 착공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

대구시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5년 푸른 옥상가꾸기 사업을 공공부문 1개소와 민간부문 19개소로 나누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상녹화는 외곽지보다 2~3℃ 높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줄여주고 냉·난방 에너지를 연간 16.6%까지 줄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녹화 하부층의 실내온도 또한 여름철에는 4℃ 가량 낮고 겨울철에는 1℃가량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0㎡ 옥상녹화는 연간 3,000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는 2018년까지 총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상 500개소, 62,000㎡를 대구시 녹색 네트워크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4월 말에 착공한 대구 서구 소재 다이텍연구원(구. 한국염색기술연구소)으로 6월 초에 준공 예정이고, 민간부문은 올해 2월에 신청한 60개소 중 19개소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를 거쳐 6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 공공부문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공간을 찾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6년도 푸른 옥상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테마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10억 원을 지원 신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사례

2015.05.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12시)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건축시장의 정체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전통적인 설계·시공 등 기존 건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하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단체·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산·학·연과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활성화포럼에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가 경제정책 관련 주요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포럼은 국전위의 주도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분야(설계, ENG, 시공, 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05.12.

농촌진흥청, 15일 농촌의 맛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 방안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촌진흥청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농촌의 맛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 방안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원 문화의 시대-농촌정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기조 연설에 이어, 제1주제 '정원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으로 한국의 정원문화와 바람직한 현대 정원의 모형, 선진 외국의 정원 조성과 최근 연구 동향 등을 발표한다.

제2주제 '농촌마을 정원 조성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정원의 현황과 특징, 가드닝 기술의 농촌마을 도입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3주제 '농촌정원 조성 사례와 유지 관리'로 농촌 지역 정원 조성 사례, 주민참여적 관점에서 본 농촌정원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발표한 뒤, 주제 발표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농촌의 정원 도입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2015.05.15.

산림청,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개최

대학생·일반인 대상, 오는 19일부터 누리집 통해
참가신청 가능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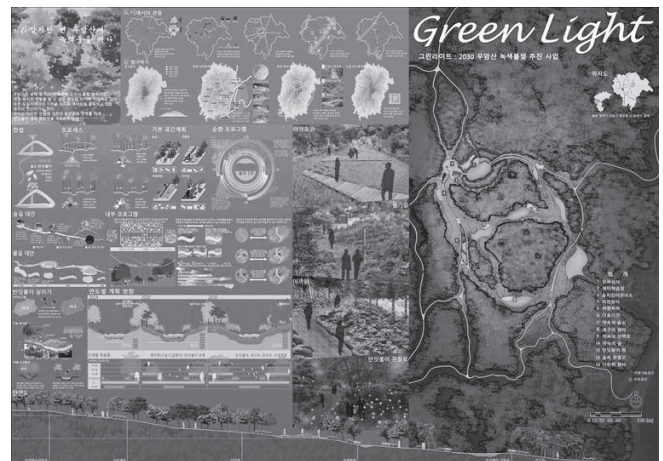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이 열린다.

산림청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도시숲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을 연다.

이번 공모는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디자인 등 관련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숲 설계공모 대상지는 경기, 인천, 부산 등 7개 국·공유지이다.

설계공모대전 참가는 오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누리집(www.dosisoop.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작품 접수(8.31.~9.14.)도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차 심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응모작품 중 최우수로 선정된 작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5백만 원이 주어지는 등 총 11개 작품에 상장과 상금 14,500천 원이 시상된다.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2015.05.18.



울산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5월 7일,
공람 공고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5월 7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이 당초 87개 구역에서 65개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6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으로 줄었고, 23개 구역(사업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이 해제되고 주민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신설됐다.

또한, 울산시는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이 사업성 부족으로 이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과도한 부담에 있음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정비구역이 다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허용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평균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실무 적용이 쉽도록 정비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은 기초자료 조사, 주민설명회, 전

문가 자문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확정된다.

2015.05.07.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결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

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05.31.

경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 마련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안 10개 마련

경기도 도시재생과

경기도는 9개 시(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² 심의의 내실을 가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심의 기준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서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²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계획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담았는지 살펴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으며, 수립한 심의기준을 해당 시에 배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5.05.04.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도입, 9대 운영 개선책 마련·시행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됐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

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350명을 선발, 확정하고 6일(수)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다.

2015.05.07.

국토부, 대구·대전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우선적으로 LH공사가 선도사업 진행

LH가 선도사업, 절차간소화 및 활성화구역 지정·인센티브 강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1·2차)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8개 산단에 총 4,4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대구와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서대구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 부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

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민간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생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5.04.30 국토위 통과)을 통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문재생 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로써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성 전 〉



〈 조성 후(예시) 〉



■ 대구·서대구 공단 조성 전(좌), 후(우)_예시

〈 조성 전 〉



〈 조성 후(예시) 〉



■ 대전 제1·산단 조성 전(좌), 후(우)_예시

〈 조성 전 〉



〈 조성 후(예시) 〉



■ 전주 산단 조성 전(좌), 후(우)_예시

2015.05.12.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 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



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행된(14.10)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 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협정 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A3 4페이지 이내)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 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계획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본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

간 연구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2015.05.22.

인천시, 내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8개 신청

인천시 도시관리국 도시재생정책관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의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중구 북성동 쪽방촌 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8개 사업(국비 123억원)에 대한 사업구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설명회 이후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를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①중구 북성동 쪽방촌 환경개선사업, ②동구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③남구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④연수구 농원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⑤남동구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⑥부평구 부평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⑦계양구 용종동 음식마을 활성화사업, ⑧서구 가재울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신청됐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들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소래포구 지역은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계양구 용종동 음식마을에는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주차 불편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 사업 시행이 주춤했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면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평가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오늘 10월 최종 결정된다.

2015.05.03.

서울시, 교육청 협업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5곳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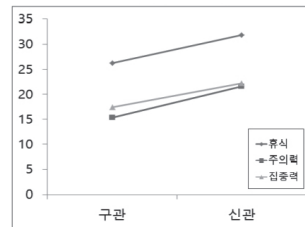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지난 '11년부터 총 12개교에 실시한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시범사업을 학생들의 실제 주의력, 집중력 향상 효과와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 5개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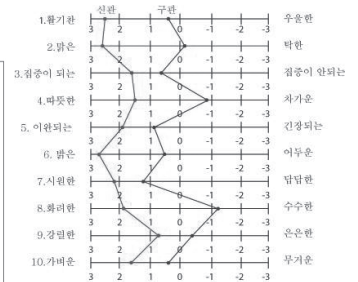
올해 실시되는 5개 학교는 무학중학교, 영림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신명초등학교, 거원중학교로 대자인 구상과정에 실사용자인 학생과 교사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참여디자인’을 본격 도입한다.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은 획일적이었던 학교 공간을 학생의 눈높이와 교실특성에 적합한 색채디자인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학습능률을 높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는 4년간 컬러컨설팅을 시범 도입한 결과, 공간이 변하자 학교 분위기는 물론 아이들의 뇌파와 감성도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뇌파변화 검사결과



■ 감성변화 검사결과

※ 구관(개선 전 공간), 신관(개선 후 공간)

아울러, 지난 4년간의 효과와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가 지난 2월 개최한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이 사업을 적용한 12개 학교들은 각 학교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 대상 학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색채디자인 개발을 통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교내 환경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5.05.04.

경남도, 김해·하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김해 근린재생 중심지가지형 사업에 200억 원, 하동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에 100억 원 응모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에 김해 근린재생 중심지가지형 1개소와 하동 그린재생 일반형 1개소를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총 35개소로 도시경제기반형 5개소,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10개소, 근린재생 일반형 20개소가 된다.

김해는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라는 사업명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에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동은 ‘하동 공동체 기반을 통한 읍민광장과 읍내시장의 활력 창출’이라는 사업명으로 100억 원 사업비에 ‘읍내시장 활력 프로젝트’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사업들이 선정되게 되면 국비 160억 원을 5년 내에 지원받게 된다.

2015.05.07.

부산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올해 국비 3,903백만 원 확보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부산시는 저소득층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세대내부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해 열악한 주거환경정비 및 주거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비 3,903백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945백만 원을 확보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0단지(다대3지구 외 9단지)에 총 사업비 4,945백

만 원(국비 3,903백만 원, 시비 601백만 원, LH공사 411백만 원)을 확보해 주거약자 편의시설, 배관교체공사 등 5개 단위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주거약자 편의시설, 배관교체공사, 외벽공사, 수배전반 설비개선, 발코니 샷시 설치, 옥상방수, 창호류 교체 등이다.

2015.05.08.

울산시, 도시경관 시범사업 착수 2016-2018년 총 6개 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 경관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경관 시범사업’을 도입,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 경관 시범사업’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울산시는 매년 구·군 공모를 통해 총 6개소(매년 2개소)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 사업비(사업당 시비 5억, 구·군비 5억)를 지원한다.

주요 대상사업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야간경관 개선, 역사문화경관 조성 및 개선, 취야지 경관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매년 5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구·군의 제안을 받아 7월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2015.05.11.



충북도, 도심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충청북도 공보관

충청북도는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 사업에 충주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국정과제로 문화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유희시설이나 기존 문화시설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청주시의 시설은 거점형으로 (구)연초제조창 동부창고 36동을, 충주시의 경우는 생활권형으로 (구)교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시설간 협력기능 등을 수행하며 시군구 단위로 조성되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는 기초 생활문화 소규모 동호회 등의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로 조성되는데 이번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서로의 마음을 문화로 치유하는 주민 교류공간 및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청주의 거점형 시설은 20억 원으로, 충주의 생활권형 시설은 5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충청북도는 2014년 첫 공모에 선정된 괴산향토자료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에 있으며 올해 선정된 2개 사업을 추진하면 총 3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운영되게 된다.

2015.05.12.

경북도, 국토부 공모사업 7개 선정

경상북도 균형발전사업단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³⁾에 ‘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7개 사업은 지역산업 부문에 1개소, 지역경관 부문 3개소, 지역생활복지부문(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2개소, 지역역량 사업 1개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전국 5개소 중 2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사업은 평가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 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05.08.

대전시, 원도심 재생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대전광역시 도심재생정책과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주관하는 대전 중앙로 일대 재생방안에 대한 민·관 협의회가 15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로 일대 원도심내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상인회 대표 등 22명이 자리했으며, 대전시의 옛 도청사 활용현황과 원도심 재생전략 발표 및 참가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³⁾ 국토부의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 추진되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옛 충남도청사 및 충남도청 부지가 대전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후 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중지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 옛 충남도청사 민·관 협의회

2015.05.18.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거리 조성 추진 ‘태평로’, ‘대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거리로 재탄생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대전시는 ‘중구 태평로(태평오거리~계백로)와 유성구 대학로(충남대오거리~유성네거리)를 남녀노소,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거리⁴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⁴ 유니버설디자인 거리 : 2011년부터 자치구별 1개소씩을 선정하여 대덕구 중리길, 동구 계족로, 서구 둔지미길 일원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동안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오던 사업을 도로분야까지 확대 추진하여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 이면서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이번에 조성되는 태평로(L=1,030m) 및 대학로(L=970m)의 기본계획은 디자인 전문회사의 현상공모를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설명회를 통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였다.

사업내용은 보행안전·편의시설 확충(보도면 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은 물론 전구간 자전거도로와 가로수, 가로등을 정비하고, 노후된 공공시설물 교체를 통해 보행자 위주의 보행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5월말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된 중리길의 경우 도로 양옆의 즐비하던 113개소의 불건전 퇴폐업소 등이 본 사업을 통해 업종전환 등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며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매주 전국단위의 벼룩시장이 성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15.05.26.

인천시, 전국 최초 재개발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에서 3,197호 공급 추진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 주거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 뉴스테이(정부가 1.13 대책에서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를 재개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업으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3,197세대를 201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할인매각에 따른 조합 손실분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보전하며,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천2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은 전체 공급물량 4,950세대(용적률 300% 적용시)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1,493세대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197세대 전체를,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수준(주변지역 전세가와 유사)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3,197세대는 전용면적 76.97㎡가 1,729세대(54%), 전용면적 84.98㎡가 777세대(24.3%)로, 중산층 가구 임대수요에 적합한 중형 평형이 전체 물량의 78.3% 수준이다.

인천시는 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의 무임대 비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는 「인천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월 26일 고시하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천2구역에 대해서는 부평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전체 공급세대의 5%를 재개발 공공임대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재개발조합의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로 조합원 분담금 등이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275%(인천시 도시계획 심의 기준)에서 300% 안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통합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 정비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9~10월 중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천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임대리츠를 설립, 조합원 분양가격 수준으로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공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청천2구역 기업형 임대는 임대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9년에는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05.27.

서울시, 지역활성화 위해 올해 18개소 보행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서울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보행환경개선지구 5개소, 보행자우선도로 13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올해 영등포·성동·강동·마포·송파구 각 1개소 씩, 총 5개소가 추가로 조성되며, 영중로(영등포)·서울숲길(성동구)·강풀만화거리(강동구) 등 3개 지역은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곳으로,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고 운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상권, 지역성과 연계한 보행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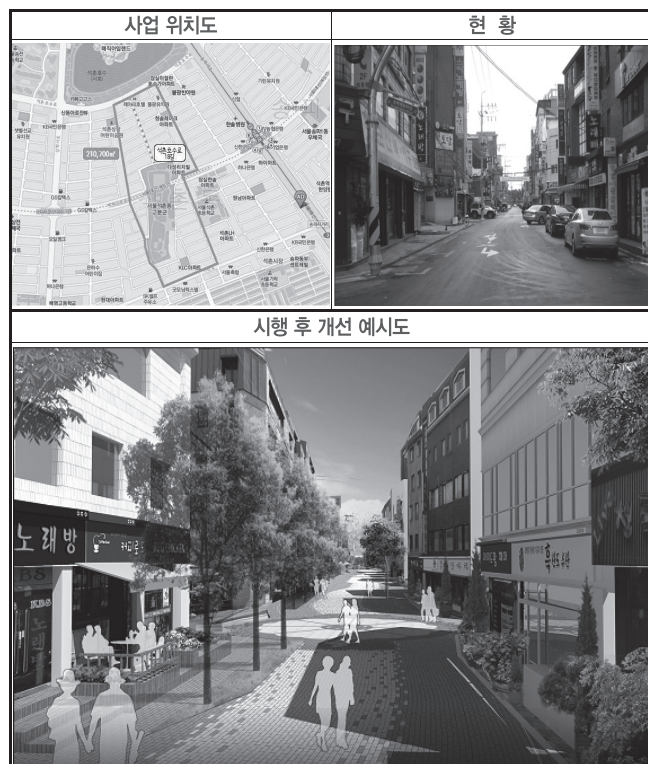
'보행자우선도로'는 시내 13개 자치구 각 1개소 씩, 총 13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거 ▲상업 ▲학교주변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유형별로 조성하되 '보행 안전 확보'에 특히 중점을 두고 개선된다.

서울시는 보행자우선도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위한 자치구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회를 운영하여 계획부터 공사,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년 간 보행자우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보행분야 연구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에 참여해 온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업무협약(5월 22일)을 맺고, 보행 관련 정책 및 환경 개선에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시도(송파구 석촌동 일대)

2015.05.31.

국토부, 공공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전국 아파트에 32만 부 배포, 소통·공동체 생활문화 정착 기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화재 등 대형 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주의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의 59%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에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안전사고 대응요령 홍보물 시안

2015.05.10.

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비지원을 통해 총 54억원 규모로 2016년 토탈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토탈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

경상북도는 오늘 8월 7일까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민간참여형 '토탈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옥외광고 시범거리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 등 3개 분야의 디자인 시범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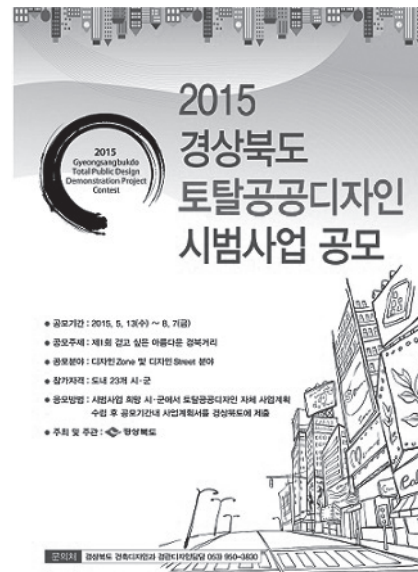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분야는 도시환경의 문화적 기반향상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옥외광고 시범거리는 간판문화 개선에 대한 도민의 자율적 공감대 형성으로 아름다운 간판과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을,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1회 걷고싶은 아름다운 경북거리' 만들기란 주제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 존과 볼거리가 있는 머물고 싶은 디자인 거리 분야 공모에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응모방법은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서 지역주민과 상점주, 건물소유주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교수 및 광고협회 등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자체 설계공모 후 신청서를 경북도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작품 심사와 함께 시범사



■ 경상북도 토탈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

2015.05.14.

울산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 실시 토론결과 '2025년 목표 울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2025년 목표 울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오는 6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울산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의 시민 참여, 온라인 정책토론에 접속하면 된다.



참여 내용은 일반사항, 지역여건 및 일상생활, 시의 현황 및 도시과제, 울산형 도시재생의 지향점(목표), 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것 등이다.

울산시는 '2025년 목표 울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지난 2014년 12월 착수, 오는 2015년 12월 완료한다.

2015.05.20.

또한,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는 도시재생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시민자문단을 운영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가 초안을 작성한 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던 기존의 업무 추진방식을 탈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자문단과 시민들이 제안한 도시재생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5.05.28.

대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28일부터 구청 순회 의견 수렴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형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28일 동구청을 시작으로, 7월초까지 구청별로 설명회를 열어 '광주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와 함께,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누구나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의견수렴란을 만들어 운영 하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추진중이다. 지난 4월1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